

# 민주 전대, 호남 표심에 달렸다

### 전체 당원 210만명 중 80만명...지도부 선출 좌우

### 대표·최고위원 출마자들 '호남구애' 가속화 전망

민주당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민주당원들의 표심이 지도부 선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지역 민주당원이 전체 당원의 38%, 권리당원의 39%, 대의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의 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당원은 권리당원을 포함 210만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호남지역 당원은 광주 18만7753명, 전남 27만6429명, 전북 34만3216명 등 80만7398명으로 집계

했다.

전체 민주당원 가운데 당비 납부를 약속한 권리당원은 17만1030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8만9783명으로 전체 민주당원의 4.2%에 그쳤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지역 권리당원은 광주 1만3100명, 전남 2만729명, 전북 3만1836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승남 민주당 수석사무총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정비 사업을 완료한 결과,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당원

정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 폐이퍼 당원을 걸러내고 20만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 당원과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5·4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11만5,677명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은 광주 8711명, 전남 1만3818명, 전북 2만2986명 등 4만5515명으로 투표권이 부여된 민주당 권리당원의 39.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의원 1만2245명 가운데 호남지역 대의원은 광주 462명, 전남 728명, 전북 706명 등 189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하지만 영남지역 대의원은 2534명

으로 오히려 호남보다 638명이나 많았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인구가중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원 및 총선·대선 가중치 등을 감안한다면 호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지도부 경선에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잇달아 호남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예비 경선 이후, 본격적인 경선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호남 당원에 대한 구애의 발걸음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모 당권 주자 진영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 당권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면 호남 표심을 놓고 각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잡은 민주 당권도전자들** 민주당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신계륜(왼쪽부터),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표 후보토론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선거인 4·24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1일 시작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일 중앙당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13일간의 결전체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 등을 고려해 '정권경종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 불과하지만 선거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는 물론 야권 발(發)

## “일꾼론” “경종론”...13일간의 열전 돌입

정계개편으로 정치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관심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청양의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 등 거물급 3인에게 쏠려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은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노원병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에 앞서는 상황이고, 영도에서는 김무성 후보가 민주당 김보호 후보와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으며, 부여·청양에선 이완구 후보가 민주

당 황인석 후보를 큰 폭의 지지율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원병에서 안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중심의 현 야권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김 후보 당선시 새누리당 내의 세력 재편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꾸려져 청와대에 끌려가고 있는 현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에서 청와대와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지도부 체제로의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

과, 총 선거인수가 73만49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서울 노원구 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청양군의 선거인수는 각각 16만2209명, 11만8487명, 8만9197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면서 24일 당일 현장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 없이도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19~20일 재보선 지역 79곳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기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야당간사 장병완 의원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11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했다. 18명(새누리당 9, 민주당 8, 비교섭단체 1)으로 구성된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종범

의원을 여당 간사로, 장병완 의원을 야당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예산·재정개혁 특위는 앞으로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 및 위원회의 역할과 직무범위 ▲특위와 여야 상임위 간 역할 및 권한 분담에 관한 사항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공기관 등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마련 ▲복지재원,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세입재원의 확보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r

### 양승조 “계파이익 따른 잦은 지도부 교체 문제”

민주통합당 양승조(충남 천안시 금곡) 의원은 10일 “그동안 민주당의 큰 문제점은 내부 혁신보다는 계파 이익에 따른 잦은 지도부 교체”라며 “10년 동안 지도부만 23번 교체됐다”고 지적하며 계파 정치 청산과 내부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5·4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양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 민주당

의 지지가 하락하는 것은 민주당이 호남을 정치적 발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호남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출신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호남인들과 힘을 합쳐 국가적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2의 이순신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계파 중심의 정치에 물들지 않고, 당 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대선평가보고서 ‘후폭풍’

## 비주류 “문재인 의원직 사퇴해야”

## 친노·주류 “밀실음모” 강력 반발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지난 9일 공개한 대선평가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이해찬, 함명숙 전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들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보고서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발표되면서 가뜩이나 격화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비주류 진영에서는 친노·주류의 책임론을 지적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

한 발짝 더 나아가 10일에는 당사자들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비주류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전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정계은폐를 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선거에 졌다면 당연히 당 대표라든가, 선대위원장, 비주류 진영에서는 친노·주류의 책임론을 지적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

다.

그러나 친노 및 주류 진영에서는 평가보고서 내용은 물론 작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비주류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친노 성향의 흥영표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상진 평가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적인 감정, 정략적 의도로 인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 평가로 일관했다”며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평가위가 작년 대선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입당 제안 실이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다고 해석한 데 대해 “문 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평가위가 말도 안되는 것을 근거로 (문 전 후보의) 리더십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 12일 野 지도부와 만찬 회동

### 與 이어 잇단 ‘여의도 스낵십’...소통정치 시작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을 갖는 등 ‘소통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4·1부동산대책’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오는 12일 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야 소통’에 나서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4·1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및 대선 공표공약 이행을 위한 ‘6인 협의체’를 오는 12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6인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 임대

-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 ▶ 6층고급주택
- ▶ 병/의원, 약국, 커피숍, 편의점
- ▶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 매매

-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